

'이행 계획 없는'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조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기도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가운데 도가 중대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가 제정한 조례의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이행하더라도 실제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인원은 192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는 전국 256명으로, 지난 2021년 248명보다 오히려 8명 늘었다.

올해도 지난 13일 팽택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했고, 지난 15일 화성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도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김동연 경기도

지난해 사망자 192명으로 '전국 1위' 제정 한 달 넘었지만 세부 내용 없어 범위 공공기관 한정이라 효과 미지수

도 "아직 사고 발생 안 해 늦지 않아 인력 한정적이라 계획 수립중에 있어"

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직접 발의하고 올해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규정하는 범위에서 ▲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 ▲민관협력기구를 통한 자문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불시 현장점검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 등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조례에 담긴 내용을 이행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제정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세부 계획조차 수

립되지 않은 상태다.

조례의 성격이 중대재해의 예방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빠른 이행이 필요하지만, 계획이 없어 이행 시기도 미지수다.

도는 인력이 한정적인데다 아직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늦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인력이 한정적이다 보니 소관 부서에서 재해 대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담당 부서에서 취합해 지사에게 보고드린다"며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이행 계획은 수립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가 조례를 이행했을 때 실제 중대재해 사고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가 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인데, 경기도 전역이 경기도 지사의 소관은 아니"라며 "민간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면 해당 경영 책임자가 처벌 받고 이후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용 기자

김동연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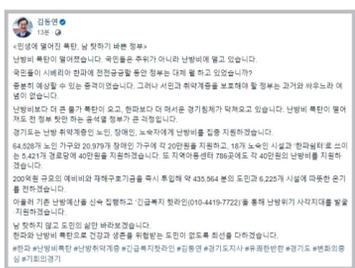
폭동 난방비 관련해 강하게尹 비판 200억 투입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폭동한 난방비에 대해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라며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지사는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경기도 제공

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곧바로 급등한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입,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564명,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사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기용 기자

도, 한파·대설특보 발효에 취약계층 관리 강화 나선다

김동연 도지사, 특별 대응 지시 2500명 공무원 비상 근무 투입

경기도내 곳곳에 한파·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위험지역 제설, 취약계층 관리 강화 등을 특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6일 오후 공문을 통해 도청과 도내 시·군 재난부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퇴근길 교통 혼잡 및 도로결빙 대비 제설작업 신속 추진, 결빙 취약구간 점검, 순찰 비롯한 예방활동 강화 ▲고속도로, 경제·접속도로 제설 작업 우선실시 등을 지시했다.

또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살얼음 발생 대비를 위한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유의 및 대중교통 이용 홍보 ▲수도관·계량기 동파 대비와 한파 취약계층 관리 등도 포함했다.

앞서 도는 지난 25일 도내 대설 예비특보 발효에 따라 행정1부지사 주재로 대설·한파 대비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비상 1단계 체제는 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



연천군 경원선 페터널에 억고름이 달렸다. 연합뉴스

이 근무한다. 31개 시·군 인력까지 포함하면 25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에 투입된다.

제설 작업은 인력 4000여 명, 장비 1800여 대, 자동제설장치 434개소를 가동해 퇴근길 상습정체 구간 등 주요 도로 및 수도권 연결 도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7일까지 도내 한파 쉼터 6777개소에 대한 운영 점검도 진행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도내 한파 피해 상황을 보면 계량기 동파 95건이 접수됐다. 인명피해로는 한랭 질환자가 6명이 확인됐다.

대설주의보는 안산·평택·화성·수원·오산·군포·의왕·용인·안성·성남·이천·여주·광주 등 13개 시에, 한파주의보는 연천·포천·가평·풍무·천안·주파·양평 등 7개 시·군에 각각 내려졌다. 김혜진 기자



인천경기기자협회 '2022년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재우 기자

본지 정경아 기자 '2022년 올해의 기자상' 수상

인천경기기자협회 시상식 개최 '윤석열차' 특종으로 공로 인정

경기신문 문화부 정경아 기자(아래 사진)가 인천경기기자협회 '2022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26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에서 '2022년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인천경기기자협회 각 지회를 가장 빛냈다고 평가 받은 1인이 '올해의 기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경아는 경기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윤석열차' 특종과 관련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경로의 취재를 이어 갔다. 특히 시시각각 드러나는 이슈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화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 여전히 '블랙리스트'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대상을 조망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올해의 기자로는 ▲정경아 경기신문 문화부 기자(윤석열차 연속보도) ▲조주현 경기일보 사진부 기자(폭우에 침수된 중고차·되풀이된 약품, 돼지 폐육 사진보도) ▲안재균 기호일보 인천분사 정치부장(영세 시공사,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공사 말았다 파산 위기 보도) ▲김종택 뉴스스 경기남부본부 사진부 국장(평택 병동창고 화재·수원 세모너 사건·신영호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인 퍼포먼스 사진보도) ▲최은지 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 기자(농민이 전세사기 피해 보도) ▲이경훈 인천일보 경기분사 사회부 기자(화성문화재단 채용 비리 보도) ▲이한빛 중부일보 디지털뉴스부 기자(지선 팩트체크, AI 격파남, 빅데이터로 본 지방선거) 등이 선정됐다. 경인일보지회는 '2022년 올해의 기자-단체부문'에 선정됐다.

이후준 인천경기기자협회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현장을 발로 누비며 인천-경기지역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한 협회 모든 회원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배백훈 기자



"민주당의 비겁한 포퓰리즘 후폭풍"

도의회 국힘, 난방비 폭탄 관련 논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을 두고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진정 남 탓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역으로 비판했다.

도의회 국힘 정책위원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민생 위기로 들끓는 민심을 기다렸다는 듯 현 정부 대책 비난에만 혈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연태영 경제부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민주당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에 여념이 없다"며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힘 정책위는 "가스요금 폭동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는 문재인 정부와 당시 집권 여당이 지난 민선 7기 지방 권력 대다수를 독식했던 민주당의 비겁한 포퓰리즘이 가져온 후폭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 임기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는 2~3배 이상 올랐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인상된 가스비는 13%p에 불과했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의 누적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 실질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이제 와 그 시한폭탄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마치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낯뜨겁기 짝이 없는 후안무치의 정황"이라며 "반성과 자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당장 위기에 몰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난방비 20만 원 지원, 쉼터로 지정된 도내 경로당 등에 대한 난방비 4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도민 시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용 기자

"미래성장 분야의 역동적인 지역생태계 구축"

강성천 경기경제과학진흥원장 취임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신임 원장이 26일 취임했다.

이날 경과원 1층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강 원장은 "전사적인 수출 지원체제 가동, 반도체·바이오·헬스·첨단모빌리티 등 미래성장 동력 분야의 역동적인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강 원장은 취임식 후 노조와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곧바로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

간을 가졌다. 강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혜진 기자

Advertisement for MediCheck health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